

주간 통일정세

2017-26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6.24	北 김영남, 모잠비크 대통령에 국경절 축전(연합뉴스)
		北 노동당 중앙위원회,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창건일 축전(연합뉴스)
		北 노동당 중앙위원회, 근로자들에게 축하문 전달(연합뉴스)
	6.25	北, 6·25 맞아 평양시 군중대회…“공화국은 핵강국”(연합뉴스)
		北 매체, 6·25전쟁 발발일 맞아 “핵억제력 협상물 아냐”(연합뉴스)
		北 매체, ‘제재·대화 병행’ 불가입장 거듭 주장(연합뉴스)
군사	6.26	주한미군, 대북 정밀타격용 장거리미사일 ‘재침’ 전격 배치(연합뉴스)
	6.27	헤커 “北, 수소탄원료 ‘3중수소’ 생산 능력 있어 보여”(연합뉴스)
	6.29	적 전투기 표적정보 실시간 공유…디지털 방공시스템 국내 개발(연합뉴스)
경제	6.24	中, 北 석탄 수입중단 여파 5월 대북수입액 32% 급감(연합뉴스)
		“폴란드, 작년부터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연합뉴스)
	6.26	FATF “북한과 사실상 거래중단…최고수준 제재 유지”(연합뉴스)
	6.27	中 북한산 석탄 금수결정 후 3개월간 수입량 ‘제로’(연합뉴스)
	6.28	5월 北 석탄 수출가격, 전달보다 12% 하락(연합뉴스)
		교도통신 “북한, 매년 석유제품 30만t 러시아에서 조달”(연합뉴스)
		中매체 “중국석유그룹, 북한에 연료용 기름 판매 잠정 중단”(연합뉴스)
	6.29	北, 중국산 석유제품 수입 지난해보다 17.6% 증가(연합뉴스)
		러 극동서 10만달러 밀반출 북한인 적발…“제재로 송금 어려워”(연합뉴스)
	6.30	브누신 美재무 “北으로 가는 모든 자금 차단…성역은 없다”(연합뉴스)
美, ‘돈줄 차단’ 中단둥은행 제재…北 강력반발 전망(연합뉴스)		
“北-대만 1분기 교역액, 작년보다 97% 줄어”(연합뉴스)		
사회 문화	6.26	北, 반미투쟁월간 우표 2종 발행(연합뉴스)
	6.27	북한서도 휴대전화 앱으로 ‘가는 길’ 찾는다(연합뉴스)
	6.28	차량 느는 北도 안전 골머리…어린이 교통공원 건설분(연합뉴스)
	6.29	북한 신형 스마트폰 ‘진달래3’ 출시…“아이폰과 외형 비슷”(연합뉴스)
외교 국방	6.24	北 ‘가뭇 투쟁’에 총력…컴퓨터에서 소달구지까지 동원(연합뉴스)
		펜스 美부통령 “北 핵·미사일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압박”(연합뉴스)
		“외교행낭 강탈당했다” 주장 北관리들 아직 뉴욕 체류(연합뉴스)
		日언론 “北, 美에 ‘중국 빼고 직접 핵·미사일 협상’ 요구”(연합뉴스)

6.25	日 F35 전투기에 지상공격미사일 배치...北군사기지 타격 '업무'(연합뉴스) 北, 유엔사무국에 외교관 파견추진...美日, '정보유출 우려' 반대(연합뉴스)
6.27	트럼프 "北, 엄청난 문제 일으키고 있다...시급히 해결해야"(연합뉴스) "외교행낭 강탈 주장 北관리, 행낭 없이 귀국"(연합뉴스)
6.28	조선신보 "北 잔류 일본인 1명만 생존"...日정부 압박(연합뉴스)
6.29	UN비확산회의 '北 핵·미사일' 규탄...北 "핵무력 건설 계속"(연합뉴스)
6.30	CNN "미국방부, 트럼프에 대북 군사옵션 제출 준비돼 있어"(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보도일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	-	-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7. 6. 24.

■ 北 김영남, 모잠비크 대통령에 국경절 축전(연합뉴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난 20일 모잠비크 국경절을 맞아 필리페 니우시 모잠비크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함.

다. 주요 기관 행위

2017. 6. 24.

■ 北 노동당 중앙위원회,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창건일 축전(연합뉴스)

-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모잠비크 해방전선당 창건 55주년을 맞아 24일 전체 당원들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중앙통신이 전함.

■ 北 노동당 중앙위원회, 근로자들에게 축하문 전달(연합뉴스)

-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121 입업연합기업소 노동자와 기술자 일꾼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 모임이 지난 23일 열렸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알림.

2017. 6. 25.

■ 北, 6·25 맞아 평양시 군중대회...“공화국은 핵강국”(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고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조함.
-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 공화국은 명실상부한 핵 강국”이라며 “무진 막강한 핵 억제력으로 핵 공갈을 일삼는 자들을 다스릴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매체가 전함.

- 그는 “만일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고 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적인 최첨단 핵 공격 수단들로 침략자들을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격멸 소탕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협을 기어이 성취할 것”이라고 밝힘.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7. 6. 25.

■ 北 매체, 6·25전쟁 발발일 맞아 “핵억제력 협상물 아냐”(연합뉴스)

- 북한 매체는 6·25전쟁 67주년인 25일 핵무기를 포함한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핵 억제력은 협상용이 아니라고 밝힘.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실은 ‘미제의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제목의 사설에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며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은 결코 그 어떤 협상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어리석은 북핵 포기 야망을 버려야 한다”며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북침 핵전쟁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선제공격능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함.

2017. 6. 26.

■ 北 매체, ‘제재·대화 병행’ 불가입장 거듭 주장(연합뉴스)

- 북한은 26일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이 양립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함.
-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제재와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는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대화는 당사자들 사이의 호상 존중과 평등, 신뢰를 생명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이어 “남조선 당국이 제재압박과 대화병행을 떠드는 것은 사실상 북남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같다”면서 “제재와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명백한 입장”이라고 밝힘.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7. 6. 27.

■ 헤커 “北, 수소탄원료 ‘3중수소’ 생산 능력 있어 보여”(연합뉴스)

- 미국의 저명 핵 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는 27일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 “북한이 수소탄의 원료 가운데 하나인 3중수소(tritium)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함.
- 헤커 교수는 이날 한국학술연구원이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개최한 제14차 코리아포럼 ‘북핵문제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북한이 3중수소의 핵심 원료가 되는 리튬-6를 판매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이에 비춰보면 북한이 3중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함.
- 그는 “(북한 영변을 찍은) 상업위성 사진을 보면 많은 시설들이 건설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원자로 시설의 하나가 리튬-6에서 3중수소를 추출하는 용도일 수 있다”고 덧붙임.

나. 한국 및 미국

2017. 6. 26.

■ 주한미군, 대북 정밀타격용 장거리미사일 ‘재즘’ 전격 배치(연합뉴스)

- 주한미군이 한반도 유사시 대북 정밀타격 임무에 동원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재즘(JASSM)’을 전격 배치한 것으로 알려짐.
- 이 미사일은 군사분계선(MDL) 이남 상공의 전투기에서 발사하면 평양의 주요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됨.
- 복수의 군사외교 소식통은 26일 “주한미군이 최근 전북 군산 공군기지에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인 JASSM(재즘) 10여 발을 전력화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2017. 6. 29.

■ 적 전투기 표적정보 실시간 공유…디지털 방공시스템 국내 개발(연합뉴스)

- 북한군 전투기 침투를 포함한 적의 공중 위협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방공 무기체

계를 거대한 디지털 네트워크로 만들어 작전 효과를 높이는 ‘방공지휘통제경보 체계’가 국내 기술로 개발됨.

-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29일 “네트워크 중심 작전 환경에서 자동화된 국지 방공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힘.
- 방공지휘통제경보체계는 군단급, 사단급 부대의 방공 무기체계를 네트워크로 만든 것으로 ‘방공C2A체계’로 줄여 쓰며, C2A는 ‘Command Control and Alert’(지휘통제경보)를 가리킴.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 특이사항 없음

다. 대외 경제 관계

2017. 6. 24.

- **中, 北 석탄 수입중단 여파 5월 대북수입액 32% 급감(연합뉴스)**
 -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중단으로 지난달 중국의 대(對) 북한 수입액이 작년보다 30% 이상 급감함.
 - 중국 해관총서(관세청)가 24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국가별 월교역액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달 북한으로부터 수입액은 모두 1억2천375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6% 감소함.
 - 이는 해관총서가 국가별 수출입 통계를 공개하고 있는 2014년 6월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3개월 연속 급감세를 나타내고 있음.
- **“폴란드, 작년부터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중단”(연합뉴스)**
 - 폴란드 정부가 지난해부터 북한 노동자들의 입국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폴란드 정부는 “평양 주재 폴란드 대사관이 지난 2016년과 2017년(6월 24일

- 현재)에 북한 주민들에게 단 한 건의 고용 비자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힘.
- 최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폴란드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고 “현재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그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함.

2017. 6. 26.

■ FATF “북한과 사실상 거래중단…최고수준 제재 유지”(연합뉴스)

- 금융위원회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1~23일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연 총회에서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내용의 성명을 채택했다고 26일 밝힘.
-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지속 등에 대응해 강화된 유엔 안보리 차원 대북제재 결의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금융제재를 FATF의 기준과 가이드스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의함.
- 이번 성명에서 FATF는 북한에 대한 사실상 거래중단, 북한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 금지 등 최고수준의 제재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FATF는 북한에 대해 2011년 이후 최고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2017. 6. 27.

■ 中 북한산 석탄 금수결정 후 3개월간 수입량 ‘제로’(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차원에서 북한산 석탄 수입금지를 선언한 이후 지난 5월까지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27일 중국 해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 석탄 수입 중 북한산은 없었고 인도네시아와 몽골, 러시아산 수입이 급증함.
- 중국은 지난 2월 18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뒤 지난 3월과 4월에도 북한산 석탄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데다 북중 교역에서 철광석과 함께 석탄은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이라는 점에서 북한에 작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임.

2017. 6. 28.

■ 5월 北 석탄 수출가격, 전달보다 12% 하락(연합뉴스)

- 북한산 석탄의 5월 기준 수출 가격이 4월보다 약 12%나 하락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를 인용해 28일 보도함.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산 석탄의 5월 평균 가격을 1t당 미화 80.93달러로 산정했으며, 이는 4월 기준 북한산 석탄 평균 가격(1t당 91.83달러)보다 11.9% 하락한 수치임.
- 대북제재위가 북한산 석탄의 평균 가격 추정치를 매달 공개하는 것은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을 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이행하기 위한 것임.

■ 교도통신 “북한, 매년 석유제품 30만 리시아에서 조달”(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까지 러시아로부터 연간 20만~30만의 석유제품을 수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8일 한 탈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에서 연료조달을 담당했던 간부출신 탈북자 리정호(59)씨가 이같이 주장했다고 전함.
- 리씨는 “북한이 1990년대부터 연료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대부분은 경유다”라며 “싱가포르의 여러 중개업자를 통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훗카에서 운반해온다”고 설명함.

■ 中매체 “중국석유그룹, 북한에 연료용 기름 판매 잠정 중단”(연합뉴스)

- 중국석유그룹이 최근 대북 제재 분위기와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북한에 휘발유 등 연료용 기름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고 중국 금융 매체인 중금망(中金網)이 28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함.
- 이 매체는 중국석유그룹이 최근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제때 대금을 못 받을까 봐 이런 결정을 했다고 전함.
- 그러면서 이번 판매 중단이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모른다면서 장기화하면 북한의 연료용 기름 수급에 큰 영향을 끼쳐 북한이 다른 공급처를 찾게 될 것으로 전망함.

2017. 6. 29.

■ 北, 중국산 석유제품 수입 지난해보다 17.6% 증가(연합뉴스)

- 북한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 많이 증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중국 해관총서를 인용해 29일 보도함.
- 중국 해관총서는 원유를 제외한 중국산 석유제품의 대북 수출이 올해 들어 5월까지 약 3천500만 달러(400억4천만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 증가한 액수임.
-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석유제품은 휘발유, 중유, 디젤유, 윤활유, 윤활유 제조용 석유 등인 것으로 알려짐.

■ 러 극동서 10만달러 밀반출 북한인 적발...“제재로 송금 어려워”(연합뉴스)

- 러시아에서 북한인이 외화를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은행을 통한 합법적인 송금이 어려워지면서 인편으로 외화를 운송하려는 시도 때문으로 추정됨.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공항 세관은 29일(현지 시간) 미화 10만 달러(약 1억1천400만 원)를 신고 없이 몰래 반출하려던 북한인 1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힘.
- 이 북한인은 블라디보스토크-평양 노선을 운항하는 북한 고려항공편을 통해 외화를 본국으로 가져가려 한 것으로 알려짐.

2017. 6. 30.

■ 므누신 美재무 “北으로 가는 모든 자금 차단…성역은 없다”(연합뉴스)

-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북한으로 가는 모든 자금을 차단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발언함.
-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한 중국의 은행과 기업, 개인 등에 대한 신규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힘.
- 재무부는 이날 미국이 지난해 5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후 처음으로 ‘애국법’(제311조)에 근거해,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함.

■ 美, ‘돈줄 차단’ 中단둥은행 제재…北 강력반발 전망(연합뉴스)

-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중국인 2명과 기관 1곳을 제재명단에 올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함.
- 단둥은행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연계된 혐의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사실상 해체된 홍상(鴻祥)그룹이 지분을 보유했다가 처분했으며, 따라서 이 은

행을 통해 이뤄진 북한과 금융거래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

- 제재명단에 오른 개인과 기관은 북한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사건 이후 금융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인 등의 명의를 이용하는 차명계좌 등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런 과정에서 북한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음.

■ “北-대만 1분기 교역액, 작년보다 97% 줄어”(연합뉴스)

- 올해 1분기 북한과 대만의 교역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코트라(KOTRA) 타이베이 무역관이 지난 27일 공개한 ‘2017년 1분기 북한-대만 교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29만3천 달러(한화 3억3천만 원)에 그침.
- 이 같은 액수는 작년 같은 기간 교역액 988만5천 달러(한화 113억 원)의 3%에 불과한 수준임.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7. 6. 26.

■ 北, 반미투쟁월간 우표 2종 발행(연합뉴스)

- 북한 국가우표발행국이 반미공동투쟁월간(6.25~7.27)을 계기로 새 우표 2종을 발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우표 윗부분에 ‘6·25~7·27 반미공동투쟁월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백악관을 과녁으로 정하고 거기에 총탄, 로켓들이 날아가는 모습이 형상 되어 있으며 조선 인민의 무쇠 주먹에 미국 깃발이 갈기갈기 찢어져나가는 모습이 그려진 우표들은 미국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오직 총대로 결판을 보아야 하며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서나가는 것이 선군조선의 의지와 대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함.
- 하지만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사진을 살펴보면 우표 그림에 있는 조준경 안에는 미국의 백악관 대신 의회 건물이 그려져 있어 건물을 혼돈해 설명한 것으로 보임.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7. 6. 27.

■ 북한서도 휴대전화 앱으로 '가는 길' 찾는다(연합뉴스)

-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휴대전화 앱으로 자신이 방문하려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됨.
- 북한의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 '메아리'는 27일 "최근 상평정보기술교류소에서 새로 개발한 손전화기(휴대전화)용 응용프로그램 '평양안내 1.0'이 사용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전함.
- 이 프로그램에는 각종 서비스 시설과 과학, 교육, 체육, 문화, 보건기관의 위치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약도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으며, 여러 시설의 전화번호와 서비스 내용, 과학기술소식, TV 순서, 흥미 있는 생활상식 등 생활정보도 함께 제공함.

2017. 6. 28.

■ 차량 쓰는 北도 안전 골머리...어린이 교통공원 건설붐(연합뉴스)

- 북한 전역에서 최근 잇따라 어린이 교통공원이 건설되고 있음.
- 북한 노동신문은 27일 '수도의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공원 훌륭히 건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시) 연못동 지역에 어린이들의 교통안전 교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이 새로 훌륭히 건설됐다"고 밝힘.
- 신문은 평양 어린이 교통공원이 착공한 지 6개월여 만에 완공됐으며 "1만2천㎡에 달하는 면적에 교통안전교육관과 야외교통안전실습장을 비롯해 어린이들의 심리에 맞게 교통안전 교육을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고 보도함.

2017. 6. 29.

■ **북한 신형 스마트폰 ‘진달래3’ 출시…“아이폰과 외형 비슷”(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신형 스마트폰 ‘진달래3’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음.
- 29일 텡쉰(騰迅·텐센트)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 만경대 정보과학기술은 최근 아이폰과 외형이 비슷한 ‘진달래3’라는 스마트폰을 출시함.
- 만경대 정보과학기술 측은 “진달래3의 연구 개발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디자인 및 운영 시스템 등 모든 작업이 북한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함.

■ **北 ‘가뭄 투쟁’에 총력…컴퓨터에서 소달구지까지 동원(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3면 전체를 할애해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황해남도 재령군 현지시찰을 비롯해 군인과 민간인, 어린 학생들까지 가뭄 극복에 총동원된 여러 상황을 상세히 소개함.
- 노동신문은 또 ‘온 나라가 가뭄(가뭄)과의 투쟁에 총동원, 총집중’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통해 “농업성에서는 컴퓨터망을 통하여 날씨조건에 맞게 물 주기에 나서서 기술적 문제, 물주는 시간 등을 규정해주고 있다”고 주무 부처의 비상근무 실태를 보도함.
- 이어 “(남포 특별시) 강서구역과 룡강, 온천군 등에서는 물차와 화물차, 트랙터, 소달구지를 비롯한 각종 운수, 운반수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물주기를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현장소식을 보도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7. 6. 24.

■ **펜스 美부통령 “北 핵·미사일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압박”(연합뉴스)**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강력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 펜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우드로윌슨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의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영원히 포기할 때까지 경제·외교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 그는 “잔혹한 북한 정권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최고의 위협”이라며 “미국은

여기에 최우선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함.

■ **“외교행낭 강탈당했다’ 주장 北관리들 아직 뉴욕 체류”(연합뉴스)**

- 최근 뉴욕 공항에서 미 당국에 외교행낭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한 북한 관리들이 아직 뉴욕에 머무르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24일 보도함.
- 이 관계자는 “북한 관리 3명이 여전히 뉴욕 유엔 북한대표부에 머무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함.
- 그는 미국 측이 아무 이유 없이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 외교행낭을 강탈했다는 북한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하며, 현재 이들이 북한대표부 관사로 알려진 맨해튼 인근 섬인 루스벨트 아일랜드 아파트에서 현지 직원과 함께 숙식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함.

■ **日 언론 “北, 美에 ‘중국 빼고 직접 핵·미사일 협상’ 요구”(연합뉴스)**

- 북한 고위 관리가 지난해 가을 미국 정부 전직 관리와 만나 중국이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미간 직접 핵·미사일 협상을 하자고 요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함.
- 신문은 또 북한측이 “미국 새 정권과 직접 협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미국무부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도 이런 내용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전함.
- 이런 내용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성렬 북한 외무성 부상 등과 협의를 했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 특사,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연구위원회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이 아사히신문에 밝힘.

2017. 6. 27.

■ **트럼프 “北, 엄청난 문제 일으키고 있다…시급히 해결해야”(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의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은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이런 언급은 북한이 지난 1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10차례 이상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고, 최근 미국 본토를 위협하기 위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으로 추정되는 로켓 엔진 실험을 한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임.

■ **“외교행낭 강탈 주장 北관리, 행낭 없이 귀국”(연합뉴스)**

- 미국 당국이 외교행낭을 강탈했다며 뉴욕 공항에서 귀국을 거부하던 북한 관리들이 행낭을 돌려받지 못한 채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보도함.
- 이 매체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 JFK 공항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출국심사에서 발생한 문제로 출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대표단이 25일 출국했다”고 전함.
- 국토안보부에 외교행낭을 압수당한 당사자는 리홍식 북한 외무성 인권대사, 리동일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 김문철 북한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위원장으로 알려짐.

2017. 6. 30.

■ **CNN “美국방부, 트럼프에 대북 군사옵션 제출 준비돼 있어”(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대북 군사옵션을 마련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할 준비가 됐다고 미 CNN방송이 복수의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함.
- CNN방송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들은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옵션은 북한이 지하에서 핵 또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감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될 것이라고 발언함.
- ‘지하 핵·탄도미사일 시험’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의미심장한 진전을 이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들은 설명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2017. 6. 28.

■ **조선신보 “北 잔류 일본인 1명만 생존”…日정부 압박(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8일 생존해

- 있는 해방 후 북한 잔류 일본인이 1명뿐이라고 밝힘.
- 조선신보는 이날 기사에서 “일제의 패망 후 조선에 남은 잔류 일본인은 2014년 5월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조·일(북·일) 정부 간 회담 합의에 따라 조직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로 8명이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일본 정부가 외면하는 사이에 그중 7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생존해 있는 잔류 일본인은 한 명이 되었다”고 밝힘.
 - 신문은 특별조사위원회 일본인유골분과에 소속돼 활동했던 조희승 일본연구소 상급연구원을 인용해 “(북한) 잔류 일본인들과 일본에 있는 가족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온 이 문제가 (북·일) 합의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고 전함.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7. 6. 25.

■ 北, 유엔사무국에 외교관 파견추진…美日, ‘정보유출 우려’ 반대(연합뉴스)

- 북한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 사무국에 외교관 파견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 측이 정보유출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5일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기구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파견국이 경비를 부담해 일정 기간 근무시키는 제도(JPO 파견)를 이용해 외교관 파견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지난 3월 이 제도와 관련한 각서를 유엔과 체결한 뒤 자국 외교관을 정치 담당 부서에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파견하려는 사람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외무상 근무 당시 국제회의에 통역으로 동행했던 남성 외교관으로 알려짐.

2017. 6. 29.

■ UN비확산회의 ‘北 핵·미사일’ 규탄…北 “핵무력 건설 계속”(연합뉴스)

-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주제로 하는 유엔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규탄하는 성명이 채택됨.

- 북한은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어떤 제재와 압박, 군사적 공격에 상관없이 “핵무력(nuclear arsenal) 건설을 계속할 것”이라며 반발함.
-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볼리비아 주재로 비확산 회의를 개최했으며, 성명은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활동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힘.

2017. 6. 30.

■ “**美, 워비어 사망 계기 북한여행 주의보 갱신**”(연합뉴스)

- 영국 정부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어(22) 사건을 계기로 북한여행 주의보를 갱신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함.
- 영국 외교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수정 발표한 북한여행 주의보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사소한 일로 간주할 수 있는 범죄가 북한에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북한 지도부나 당국에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주의를 당부함.
-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급변할 수 있다면서 “북한을 여행하는 영국인들은 정치와 안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밝힘.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6.23		美 “한미 훈련과 북핵·미사일실험, 등가성 없어(연합뉴스)
			美의회 文대통령 방미환영 초당 결의안 발의 “가장 중요한 동맹(연합뉴스)
	6.25	강경화, 美2사단 방문...“한미 정상, 北위협 다룰 큰그림 그릴 것”(연합뉴스)	
	6.26		미국 USTR 대표 “한미FTA 철폐 계획 없다”(연합뉴스)
			강경화 “사드는 한미동맹의 결정...번복할 의도없어”(연합뉴스)
6.30	트럼프 만나 분위기 띄운 文대통령...“나도 가짜뉴스로 고생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6.27		中외교부, 한국 ‘대북지원 물자 반출승인’에 “좋은 일” 반색(연합뉴스)
	6.29	“한중일 정상회의 7월말 개최무산...中난색 표시해 무기연기”(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6.23		日, 文대통령 ‘위안부 문제 역사과하라’ 발언에 항의(연합뉴스)
	6.27	정부 “위안부는 매춘부”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日총영사발언, 사실이면 매우 부정적”(연합뉴스)	
			日정부, 文대통령 후쿠시마사고 사망자수 언급에 유감 표명(연합뉴스)
			정나가미네 주한日대사 “위안부합의 상호 착실히 이행해야”(연합뉴스)
한러 관계	6.27	한·러, 극동 시베리아 지역 경제협력 방안 논의(연합뉴스)	
	6.28		러 “한반도 위기 해결 ‘로드맵’ 마련…관련국들과 논의 기대”(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6.23		中외교부 “트럼프, 미중협력 강화해 한반도비핵화 실현 기대”(연합뉴스)
	6.28	美, 中 4년만에 ‘최악 인신매매국’ 강등…北 15년 연속 오명(연합뉴스)	
		신임 주중 美대사 부임 “미중 관계 중요…하반기 트럼프 방중”(연합뉴스)	
			中, 주중美대사 류샤오보 언급에 “수감자 문제 논의대상 아냐”(연합뉴스)
	6.30	트럼프 정부,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中반발 예상(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6.23	美 첨단무기 집결장 된 日이와쿠니시...전투기 130여대 모인다(연합뉴스)	
	6.25	美日, 내년 하와이서 지대함미사일 훈련...“해양진출 中겨냥”(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6.26	中해경선, 영유권분쟁 센키쿠해역 또 진입...日, 중국에 항의(연합뉴스)	
	6.27	주일 중국대사관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반대”(연합뉴스)	
	6.28	일대일로 참여하나...中·日 아시아 인프라사업 연계 추진(연합뉴스) 中, ‘위안부는 매춘부’ 日총영사 발언 맹공...“역사 왜곡행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6.27	日, 러시아 쿠릴 4개섬에 공동경제활동 조사단 파견(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7. 6. 23.

■ 美 “한미 훈련과 북핵·미사일실험, 등가성 없어”(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맞교환이 가능한 활동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VOA에 “한미가 오래 진행해온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군사 훈련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사이에는 등가성(equivalency)이 없다”고 밝힘.
- 애덤스 대변인의 언급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연계할 수 있다는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 대사의 최근 인터뷰 발언에 대한 논평을 VOA가 요청한 데 따른 답변임.

■ 美의회 文대통령 방미환영 초당 결의안 발의 “가장 중요한 동맹”(연합뉴스)

- 미국 상원은 22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다음 주 방미를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발의함. 공동발의자 19명은 그동안 미 상원이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 및 방미,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와 관련해 발의한 역대 환영 결의안의 참여 숫자 중 가장 많은 것이라고 외교소식통이 전함.
- 환영 결의안은 먼저 “미 상원은 미국을 처음 방문하는 문 대통령을 환영한다”면서 한미동맹 강화,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재확인 등의 입장을 밝힘. 또 대북제재 결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완전하고 공정한 이행 필요성, 안보-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확대 등을 촉구함.
- 사드와 관련해선 한미동맹에 의한 결정을 바꿀 의도가 없고, 또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적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담김.

2017. 6. 25.

■ **강경화, 美2사단 방문…“한미 정상, 北위협 다룰 큰그림 그릴 것”(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5일 6·25전쟁 67주년을 맞아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미연합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함.
- 강 장관은 이날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격려사를 통해 “한미동맹은 북한으로부터의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데 있어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면서 “이는 우리에게 힘겨운 도전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도전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힘.
- 강 장관은 이어 나흘 뒤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여러분들의 없어서는 안 될 기여에 대해 감사를 표하실 것”이라면서 “양국 정상께서는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맹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전략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 두 분께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다룰 최선의 방안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게 될 것”이라고 전함.

2017. 6. 26.

■ **미국 USTR 대표 “한미FTA 철폐 계획 없다”(연합뉴스)**

-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21~22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공청회에서 2018회계연도 USTR 예산과 통상정책 어젠다를 설명하며 “한미 FTA로 인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우려되나 현재 한미 FTA를 철폐할 계획은 없다”고 밝힘.
-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다만 “200억~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對美)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한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함.
- 민주당 존 랄슨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철폐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을 때 의회에서 많은 우려를 했다”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 대한 우려는 동의하나 한미 FTA 탈퇴 계획이 없다는 것은 다행”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강경화 “사드는 한미동맹의 결정…번복할 의도없어”(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한미) 동맹의 결정”이라며 번복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함.
-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일보와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공동주최로 열린 포럼 오찬사에서 사드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다”며 “환경영향평가 실시 는 국내적 적법 절차의 문제로서, 사드 배치 결정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강 장관은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다면,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더욱 강력해 질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었고, 우리는 동맹으로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계속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2017. 6. 30.

■ **트럼프 만나 분위기 띄운 文대통령…“나도 가짜뉴스로 고생해”(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 ‘가짜뉴스’로 곤욕을 치른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AP통신이 보도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문 대통령 부부 공식 환영 만찬의 인사말에서 문 대통령의 5·9 대선 승리에 대해 “엄청난 승리였다. 당신은 환상적인 일을 해냈다”고 축하함.
-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후보 시절 불거진 아들 준용 씨의 채용 특혜 의혹이 최근 조작 논란으로까지 번진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로 미국 주류 언론을 모조리 ‘가짜뉴스(fake news)라 칭하며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음.

나. 한·중 관계

2017. 6. 27.

■ **中외교부, 한국 ‘대북지원 물자 반출승인’에 “좋은 일” 반색(연합뉴스)**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북물자 반출이 승인되자 중국이 ‘좋은 일’이라며 반색하고 나섬.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에서 결핵 치료사업을 진행하는 유진벨재단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을 승인한 데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이런 입장을 표명함.
- 루 대변인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여러 차례 말했듯이 남북한은 이웃 나라로서 상호 관계를 개선해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고 쌍방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 평화발전을 촉진하는데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그는 이어 “중국 측은 필요한 지지를 제공할 것이며 현재 한반도 정세 아래 남북한 양측이 상호 선의를 더 많이 베풀어 한반도 정세를 완화하고 대화와 협상의 과정으로 복귀하길 희망한다”고 말함.

2017. 6. 29.

■ **“한중일 정상회의 7월말 개최무산…中난색 표시해 무기연기”(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다음달 말 개최하려고 추진했던 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가 중국 측의 소극적인 자세로 무기한 연기됐다고 일본 언론매체들이 보도함.
-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중국이 난색을 표시했다고 전함.
- 중국은 지도부의 대거 교체가 이뤄질 올가을 제19차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한중일 정상회의를 추진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옴. 요미우리신문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악화한 한중관계도 중국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임.

다. 한·일 관계

2017. 6. 23.

■ **日, 文대통령 ‘위안부 문제 日사과하라’ 발언에 항의(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사죄를 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NHK 방송이 보도함.
-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 정부에 “일본 입장과 맞지 않아 유감”이라며 “재작년 위안부 한일 합의에 의해 위안부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함.
-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이 법적인 책임을 인정해서 공식적인 사죄를 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음.

2017. 6. 27.

■ **정부 “위안부는 매춘부” 日총영사발언, 사실이면 매우 부적절”(연합뉴스)**

- 외교부는 미국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는데 대해 “사실이라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함.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이라면 고위 외교관이 했다고는 믿기지 않는 발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전시(戰時) 성폭력 행위로서 중대한 인권 침해 사안이라는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에 반하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함.
- 조 대변인은 이어 “외교부는 관련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그 사실 여부에 따라 외교채널을 통한 강한 유감 표명 및 관련 발언 철회 요구 등 필요한 대응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힘.

■ **日정부, 文대통령 후쿠시마사고 사망자수 언급에 유감 표명(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 사망자 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한국 정부에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고 지지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2일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문 대통령이 지난 19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언급한 데 대해 “올바른 이해에 기초하지 않아서 매우 유감을 느낀다”고 밝힘.
- 통신은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두고 근거가 불명확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소문에 따른 피해를 불식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는 외무성 담당자의 말을 전함.

■ **나가미네 주한日대사 “위안부합의 상호 착실히 이행해야”(연합뉴스)**

-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27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이 상호 요구된다”고 밝힘.
-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아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한국 신 대통령 체제 하에서의 한일관계 전망’을 주제로 연설하면서 위안부 합의가 “국제사회로부터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함. 그는 “위안부 합의의 확실하고 착실한 이행을 한일관계 전체의 적절한 매니지먼트(관리) 속에 자리매김 시켜 진행하고 싶다”고 부연함.
-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일본

대사의 발언은 한국 정부에 합의의 존중 및 이행을 강하게 요구하는 의미로 풀이됨.

라. 한·러 관계

2017. 6. 27.

■ 한·러, 극동 시베리아 지역 경제협력 방안 논의(연합뉴스)

- 한국과 러시아는 26일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 방안과 지방자치단체간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힘. 외교부에 따르면 이정규 차관보는 2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알렉산더 크루티코프 러시아 극동 개발부 차관과 제11차 한-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함.
- 양국 중앙 정부 관계자와 지방 자치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러시아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의 북극연구, 에너지 및 조선, 지방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더불어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내 한국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 특히 양측은 러시아 극동지역 내 한국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코트라 무역관과 러시아의 극동투자유치수출지원청 간 협의채널(핫라인) 구축을 추진하기로 함.

2017. 6. 28.

■ 러 “한반도 위기 해결 ‘로드맵’ 마련…관련국들과 논의 기대”(연합뉴스)

- 러시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한반도 긴장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담은 ‘로드맵’(장기 일정)을 마련했다며 이를 관련국들과 협의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힘.
-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리아노보스티 통신의 질문에 답하면서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해결과 관련한 입장은 일관되며 변화가 없다”면서 “우리는 모든 관련국, 특히 주요 대립국인 미국과 북한 간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통한, 전적으로 평화적인 방식의 종합적 문제 해결을 지지한다”고 설명함.
- 모르굴로프는 그러면서 “군사적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우리는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지역의 견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여러 구체적 조치들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국들과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힘.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7. 6. 23.

■ 中외교부 “트럼프, 미중협력 강화해 한반도비핵화 실현 기대”(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 미중협력 강화를 통한 조속한 비핵화를 기대했다고 밝힘.
-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미·중 외교안보대화 대화 참석차 방미했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현지시간으로 22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접견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함.
- 중국 외교부는 “양측이 한반도 핵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한반도 비핵화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양제츠 국무위원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유관국과 소통을 유지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함.

2017. 6. 28.

■ 美, 中 4년만에 ‘최악 인신매매국’ 강등…北 15년 연속 오명(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7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중국을 4년 만에 최하위 등급인 3등급(Tier 3) 국가로 분류함.
- 3등급은 국가 인신매매 감시 및 단속 수준 1~3단계 가운데 가장 낮은 최악의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된다는 것을 의미함.
-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지정되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비(非)인도적 구호 및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교육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될 가능성이 큼.

■ 신임 주중 美대사 부임 “미중 관계 중요…하반기 트럼프 방중”(연합뉴스)

- 테리 브랜스테드(70) 신임 주중 미국대사가 28일 중국 베이징 주중 미국대사관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매체들과 첫 대면식을 마침.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海外網) 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브랜스테드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양대 세계 경제 주체로서 양국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하반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힘.
- 브랜스테드 대사는 “북한의 위협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 양국이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또 중국 국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미·중 간 무역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양국관계의 협력을 강조함.

■ 中, 주중美대사 류샤오보 언급에 “수감자 문제 논의대상 아냐”(연합뉴스)

- 테리 브랜스테드 신임 주중 미국대사가 간암 말기 진단으로 최근 가석방된 노벨평화상 수상자 류샤오보(劉曉波61)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치료받을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 이 문제는 다른 국가와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중 미국대사의 발언과 관련해 양국이 류샤오보의 치료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류샤오보는 중국 국민이다. 다른 국가와 현재 복역 중인 중국 국민의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고 격양된 반응을 보임.
- 루 대변인은 류샤오보가 중국 국민이지만 브랜스테드 대사는 이 문제를 양국관계와 관련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은 이미 주중 미국대사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는 양국 간 교류와 양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통해 상호 이해와 정치적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문제가 논의대상이 아님을 재차 강조함.

2017. 6. 30.

■ 트럼프 정부, 대만에 무기판매 첫 승인…中반발 예상(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정권 출범 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계획을 승인했다고 AP 통신이 29일(현지시간) 전함. 한 미국 관리는 국무부가 13억 달러(약 1조4천865억 원) 규모의 무기판매를 승인했다고 말함.
-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는 트럼프 정부 들어, 그리고 2015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또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함.

나. 미·일 관계

2017. 6. 23.

■ **美 첨단무기 집결장 된 이와쿠니시...전투기 130여대 모인다(연합뉴스)**

- 후쿠다 요시히코(福田良彦) 이와쿠니시장은 23일 시의회에서 현재 가나가와(神奈川県)현 아쓰키(厚木)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 함재기 부대의 이와쿠니기지 이전을 수용하겠다고 밝힘.
- 후쿠다 시장이 이전 수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아쓰키 기지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호의 함재기 60기가 이와쿠니기지로 이동하게 됨.
- 로널드 레이건함이 정비를 끝내고 출항하게 되면 함재기도 거점을 항모로 옮겨 동해나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 대한 경계 활동에 나서게 됨.

2017. 6. 25.

■ **美日, 내년 하와이서 지대함미사일 훈련...“해양진출 중거냥”(연합뉴스)**

-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육상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SSM)을 사용하는 공동훈련을 내년 여름 처음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전함.
- 이는 남·동중국해 진출을 활발히 하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 차원이라고 신문은 분석함.
- 신문에 따르면 훈련은 내년 여름 하와이에서 미 해군이 주최하는 환태평양훈련(림팩)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다. 미·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중·일 관계

2017. 6. 26.

■ **中해경선, 영유권분쟁 센카쿠해역 또 진입...日, 중국에 항의(연합뉴스)**

- 중국 해경국 어선이 26일 일본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 주변 일본 영해에 진입했다고 NHK가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중국 해경국 어선

4척이 센카쿠해역에 진입한 것을 확인, 인근 해역에서 나가라고 경고함. 중국 당국 어선이 일본이 주장하는 센카쿠 주변 영해에 진입한 것은 지난 24일에 이은 것으로, 올해 들어 17일째임.

- 이에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도쿄에 있는 주일 중국대사관 공사에게 “센카쿠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영해 침입은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화로 항의함.

2017. 6. 27.

■ 주일 중국대사관 “日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반대”(연합뉴스)

- 주일 중국대사관은 최근 일본 정부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시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공표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주일 중국대사관의 장메이(張梅) 홍보 담당 참사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뒤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며 일본 측에 도발 행위를 그만둘 것을 촉구함.
-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1일 공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센카쿠 열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학생들에게 설명하도록 요구함. 문부과학성은 해설서에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 영토’로 규정하며 자국의 입장은 정당하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도록 명시해 한국의 반발을 산 적이 있음.

2017. 6. 28.

■ 日 일대일로 참여하나…中·日 아시아 인프라사업 연계 추진(연합뉴스)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협력할 용의를 비쳤던 일본이 중국의 아시아 지역내 인프라사업과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함.
- 28일 인민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27일 도쿄에서 정례 차관급 회의를 갖고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일본의 참여방안 등을 논의함.
- 양측은 일대일로와 일본이 추진해온 인프라 수출정책인 ‘고품질 인프라시설 동반 관계’를 결합해 아시아 지역내 인프라 사업을 상호 연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인민망은 전함.

■ 中, ‘위안부는 매춘부’ 日총영사 발언 맹공…“역사 왜곡행위”(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미국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했다는 보도에 대해 역사를 왜곡한 잘못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섬.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즈노카 다카시(篠塚隆)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의 위안부를 격하한 이 발언에 대한 평론을 요구 받자 이러한 입장을 표명함.
- 루 대변인은 “일본 관리의 이런 발언이 국제사회에서 고도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일본의 일부 사람들이 역사를 직시하길 꺼리고 심지어 부인하려고 하면서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함.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7. 6. 27.

■ 日, 러시아 쿠릴 4개섬에 공동경제활동 조사단 파견(연합뉴스)

- 일본이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의 공동경제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사단 70여명을 27일 파견함.
- 현지조사는 양국 공동으로 이날부터 닷새간 이뤄지는 것으로, 일본 측에선 하세가와 에이이치(長谷川榮一) 총리 보좌관이 단장을 맡음.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작년말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 섬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경제활동이 가능한 구체적 사업 분야를 정할 계획으로 알려짐.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6.24	김前특사, '워비어는 오바마 정책 희생자' 北 주장 "터무니없어"(연합뉴스) 폴란드 "2016년 이후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안 해"(미국의소리)
	6.28	미 국무부, 북한 15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 국가' 지정(미국의소리)
	6.29	미 하원 결의안 '북한 노동교화소 기독교인 7만명 수감'(미국의소리)
	6.30	미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에 '미국인 납북 의혹' 관심 촉구(미국의소리)
		미국인 절반 "워비어 사망 관련 북한 처벌해야"(미국의소리)
		영국, 워비어 사망에 북한여행 주의보 갱신(미국의소리)
		러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서 북한인 외화 밀반출 빈발(미국의소리) 국제인권단체 "문 대통령, 미한정상회담서 중국 구금 탈북자 문제 제기해야"(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6.27	북한 모성사망률, 남한의 7.5배...신생아 10만명당 82명(연합뉴스)
	6.28	北, 7월 8일까지 주민이동 금지(자유아시아방송)
	6.29	北, 여종업원 송환 또 요구..."반인권 범죄"(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특이사항 없음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6.24	영국 신문 "북-중 국경 단속 강화로 탈북자 급감"(미국의소리)
	6.26	휴먼라이츠워치, 중국에 탈북자 5명 강제복송 중단 촉구(미국의소리)
	6.27	휴먼라이츠워치, "탈북자 38명 중국에 구금...복송 안돼"(자유아시아방송)
대북지원		특이사항 없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7. 6. 24.

■ 킹前특사, '웬비어는 오바마 정책 희생자' 北주장 "터무니없어"(연합뉴스)

- 미국의 전 북한인권특사가 미국인 고(故) 오토 웬비어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 내' 정책 희생자로 규정한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이 매체는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활동했던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북한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면서 미국 국무부도 웬비어 씨의 부당한 억류에 대해 북한 측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
- 북한은 북한에서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만에 숨진 웬비어 씨에 대해 지난 2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웬비어는 우리에게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거부감에 사로잡혀 우리와의 대화를 거부해온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희생자"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그의 석방 문제를 단 한 번도 북한에 공식 요청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함.
- 킹 전 특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뉴욕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등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 반복해서 오토 웬비어 씨와 다른 세 명의 억류 미국인들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응수함.
- 그는 또한 "석방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북한이 저희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매일 영사접근을 요청했지만, 북한 외무성은 웬비어 씨와 다른 억류 미국인들에게 영사접근을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 폴란드 "2016년 이후 북한 노동자 비자 발급 안 해"(미국의소리)

- 폴란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북한인들에게 고용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또 현재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는 전체 해외노동자의 0.1% 미만이라고 밝힘.
- 평양주재 폴란드대사관은 2016년과 2017년에 북한 주민들에게 단 한 건의 고용비자도 발급하지 않았다고 폴란드 정부가 밝힘.
- 국제노동기구(ILO)가 공개한 회의록에 따르면 폴란드 대표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그 이전에 입국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함. 그러면서, 그 수는 폴란드 내 전체 해외노동자의 0.1%

- 미만에 불과하며, 그나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폴란드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고용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음.

2017. 6. 28.

■ 미 국무부, 북한 15년 연속 '최악 인신매매 국가' 지정(미국의소리)

- 미국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함. 북한이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힘. 북한이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최악의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됨.
-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올해도 3등급 국가로 남았다고 밝힘.
- 이로써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15년 연속 국무부가 지정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함. 3등급은 인신매매 방지와 단속,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해 국무부가 정한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임.
-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따르지 않고 있고,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밝힘. 특히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의 강제노동과 학생들의 강제노동, 외국 기업들과의 양자 계약을 통한 강제노동을 통해 인신매매를 후원하고 있다고 밝힘.
- 또 많은 사람들이 북한 당국의 압박 때문에 북한을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목적지 국가에서 인신매매에 취약했다고 지적함. 아울러 국내에서는 강제노동이 정치적 압박체제의 일부였다고 덧붙임.

2017. 6. 29.

■ 미 하원 결의안 '북한 노동교화소 기독교인 7만명 수감'(미국의소리)

- 미국 하원에 지난 26일 '전세계 기독교 박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됨. 공화당 소속 글렌 그로스먼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세계 약 18개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지적하면서, 미국 대통령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할 것을 촉구함.
- 결의안은 특히 북한과 관련해 기독교가 금지돼 있고, 기독교인들은 정부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감추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함. 또 만일 기독교인이 발각되면 가혹한 노동교화소에 끌려간다고 하며, 2017년 현재 약 7만명의 기독교인들이 수감돼 있다고 밝힘.

- 결의안은 북한 외에도 중동과 아프리카의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중국, 베트남 등지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 받고 있다고 밝힘.

2017. 6. 30.

■ 미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에 ‘미국인 납북 의혹’ 관심 촉구(미국의소리)

- 미 의원들이 중국 여행 중 실종된 미국인 대학생 스네든 씨 사건에 관심을 갖고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냄. 지난 2004년 8월 14일, 당시 24살의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 씨가 중국 원난성을 여행하던 중 실종됨. 일본과 한국의 납북자 관련 단체들과 스네든 씨의 가족들은 북한에 의한 납치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스네든 씨의 고향인 유타주 출신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의원이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냄. 두 의원은 서한에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04년 발생한 미국인 스네든 씨 실종 사건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힘.
- 두 의원은 스네든 씨가 그 해 여름 중국 남부 지역을 여행하던 중 실종됐는데, 이 후 10년 넘게 현지를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힘. 그러면서 역대 전문가들은 스네든 씨 실종이 지난 40년 간 북한 보안요원들이 자행한 납치 사건들과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스네든 씨의 실종 배후에 북한 정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스네든 씨가 북한에 억류돼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고 밝힘. 이들은 최근 북한에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돼 귀국한 뒤 사망한 오토 워비아 씨의 비극적인 죽음은 북한이 역대 미국인들에게 제기하는 위협을 부각시킨다고 지적함.

■ 미국인 절반 “워비아 사망 관련 북한 처벌해야”(미국의소리)

- 미국인 절반은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사망한 오토 워비아 씨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응 조치로는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와 북한여행 금지 의견이 많았음.

- 미국의 '유에스 에이 투데이' 신문과 서퓸 대학이 28일 워비어 씨의 죽음과 관련해 미국인 유권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함.
- 워비어 씨 사망 후 닷새 뒤인 24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49%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함.
- 특히 북한 정권을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자 가운데 3분의 2는 더욱 강력한 경제 제재 부과를, 10명 가운데 4명은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함. 군사 행동을 지지한 응답자는 17%에 그침. 반면 워비어 씨의 죽음과 관련한 대응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였음.

■ 영국, 워비어 사망에 북한여행 주의보 갱신(미국의소리)

- 영국 정부가 북한여행 주의보를 갱신함.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최근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을 언급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영국 외교부는 29일 수정 발표한 북한여행 주의보에서, 북한에 17개월 간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워비어 씨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국민들에게 북한여행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영국 외교부는 워비어 씨가 지난해 3월 16일 반공화국 적대 행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으며, 호텔 종업원 구역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시도한 것이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힘.
- 외교부는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사소한 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가 북한에서는 매우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특히 북한 지도부나 당국에 무례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밝힘. 그러면서 최근 몇 년 간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인 4명과 캐나다인 1명이 체포된 사실을 상기시킴.
- 영국 외교부는 특히 지난 4월 22일에 미국인 한 명 (김상덕 씨)이 명확하지 않은 적대 행위로 체포된 데 이어 5월 7일 또 다른 미국 시민 (김학송 씨)이 불분명한 위법행위로 체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여행 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강조함.

■ 러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서 북한인 외화 밀반출 빈발(미국의소리)

- 러시아 극동세관은 북한인 1명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미화 10만 달러를 몰래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됐다고 29일 발표함.
- 세관 측은 평양행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려던 이 북한인이 세관에 현금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힘. 적발된 북한인은 종이 상자에 10만 달러를

- 넣어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짐. 극동세관 측은 이 북한인이 상자 안에 약이 있다고 세관 측에 거짓 신고했다고 발표함.
- 러시아 관련 규정에 따르면 1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갖고 나가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함. 러시아 형법은 현금 밀반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3-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한편 올 들어 북한인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서 외국 돈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지난 7일에는 이 공항에서 미화 2만5천 달러를 신고 없이 갖고 나가려던 북한인이 적발됨. 당시 극동세관 측은 이 북한인이 가방에 돈을 숨겨 평양행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으며 밀반출하려던 100 달러 신권과 구권이 뒤섞인 현찰 다발을 공개함.
 - 이 공항에서는 지난 3월에도 미화 약 3만8천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갖고 나가려던 북한인이 적발됐었음. 최근 사건들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정상적인 송금이 불가능해진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됨.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송금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음.

■ **국제인권단체 “문 대통령, 미한정상회담서 중국 구금 탈북자 문제 제기해야”(미국의소리)**

-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들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국제 인권단체가 밝힘.
-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 구금된 38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임박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힘. 이 단체는 강제송환 되는 탈북자들은 고문과 장기 구금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힘. 한국 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제기할 것을 촉구함.
-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들 38명의 탈북자들을 위험이 기다리는 곳으로 돌려보내지 말도록 중국 당국에 요구하는 노력에 동참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함. 문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도 촉구해야 한다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말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7. 6. 27.

■ 북한 모성사망률, 남한의 7.5배...신생아 10만명당 82명(연합뉴스)

- 북한의 모성사망률이 남한의 7.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모성사망률이란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임신과 관련된 병으로 사망하는 여성의 비율을 뜻함.
- 임예준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서울유엔인권사무소 공동 주최로 27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북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한 심의 대비를 위한 북한 여성인권 토론회’에서 발표를 맡아 이처럼 진함.
- 북한이 지난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2002년 신생아 10만명 당 97명이었던 모성사망률이 2012년 62.7명으로 줄어듦. 또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기준 북한의 모성사망률은 신생아 10만명 당 82명으로, 같은 기간 남한의 신생아 10만명 당 11명과 견줘 7.5배에 달한다고 함.
- 임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모성사망률이 높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함. 다만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모성사망률이 신생아 10만명 당 547명에 달하고, 저소득 국가 평균도 신생아 10만명 당 495명이므로 북한의 모성 보건이 세계 최저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함.

2017. 6. 28.

■ 북, 7월 8일까지 주민이동 금지(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올해 4월부터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시킨데 이어 7월 8일까지 이동 금지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짐.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하는 바람에 장마당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힘.
- 북한당국이 내외로부터 조성된 정세를 이유로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시킨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음. 하지만 지금처럼 장기간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시킨 사례는 찾기 어렵다고 북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지적함.
- 25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중양에서 김일성의 생일행사를 구실로 4월초부터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시켰다”며 “5월엔 북과 남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이유로, 6월엔 농촌동원과 가뭄막이를 구실로 주민들의 이동을 여전히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오히려 중양에서 농촌동원이 끝난 6월 20일부터 김일성의 사망일인

7월 8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들의 이동을 더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며 “숙박검열과 주민신고검열을 시도 때도 없이 벌여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7. 6. 29.

■ **北, 여종업원 송환 또 요구…“반인권 범죄”(연합뉴스)**

- 북한은 우리 정부가 ‘집단 탈북’ 여종업원 12명과 복송을 요구하는 탈북민 김련희 씨를 강제억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송환을 또다시 요구함. 북한 ‘강제납치피해자구출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대변인 담화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강제억류 행위는 반인도주의적 만행이며 국제인권 기준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반인권 범죄”라고 비난했다고 중앙통신이 밝힘.
- 대변인은 “남조선 당국은 그들(여종업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외부와 격폐(격리)시켜 감금하고 있다”며 “이것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 국민들을 강제로 억류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함.
- 이어 “남조선 당국이 공화국의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우리 국민들에 대해 그 무슨 ‘법적 절차에 따라 정착한 국민’이라는 모자를 씌워놓고 ‘복송할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체제를 부정하는 용납 못 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실제로 본인 의사를 존중한다면 김련희와 12명의 여성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을 그들의 요구대로 지체 없이 공화국의 품으로 돌려보내면 될 것”이라며 이들의 무조건 송환을 요구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7. 6. 24.

■ **영국 신문 “북·중 국경 단속 강화로 탈북자 급감”(미국의소리)**

- 북한과 중국 당국의 국경 단속 강화로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의 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함. 인권 전문가들은 탈북자 문제를 인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는 중국 당국을 비판함.
-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북한을 떠나 한국 등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탈출 과정이 이전에 비해 크게 어려워졌다고 보도함.

- 특히 한국은 탈북자 3만 명 시대에 돌입하는 등 연간 탈북자의 숫자가 최근까지 꾸준히 늘었지만, 올해는 그 수가 크게 주는 등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고 밝힘.
-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런 현상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이후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함. 국경 통제가 강화된 것은 물론, 북한과 중국의 단속이 탈북자뿐 아니라 탈북을 돕던 선교사들과 브로커들에게까지 이뤄지고 있음.

2017. 6. 26.

■ **휴먼라이츠워치, 중국에 탈북자 5명 강제복송 중단 촉구(미국의소리)**

-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중국 당국에 최근 체포된 5명의 북한 난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촉구함.
- 이 단체는 또 중국이 이들 5명을 보호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밝힘.
-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북송된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장기 구금하고,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등을 자행하는 북한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냈다고 밝힘.

2017. 6. 27.

■ **HRW “탈북자 38명 중국에 구금…복송 안돼”(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당국의 탈북자 복송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짐.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 워치는 “현재 중국이 구금하고 있는 탈북자는 최소 38명”이라고 밝힘.
-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지난 16~17일 사이 탈북자 5명이 중국 당국에 붙잡혔다”면서 “이들은 중국 지린성 옌지 시 근처 중국변방대에 억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힘. 하지만 이 수는 단체 차원에서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
-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의 조인국이기 때문에 난민이 학대나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면 송환하지

-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어길지, 말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임.
-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긴급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보고 이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5. 대북지원

- 특이사항 없음.